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규정 보완 등〉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5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규정 보완 ..... | 3  |
|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 ..... | 9  |
| ※ 참고사항                           |    |
| 1. 관계 협회 등 의견 .....              | 12 |
| 2. 유사 입법례 .....                  | 1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0.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으로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라.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

### Ⅲ. 검토의견

1.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규정 보완(안 제9조 등)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등록) ① -----<br>-----<br>-----<br>-----<br>-----<br>-----<br>-----,<br>-----,<br>-----<br>-----<br>-----<br>-----. |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신설>

8. ~ 11.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1. ~ 6. (현행과 같음)

7.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 13.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이하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인 경우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제9조의3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3(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                                                                                                                                                                                                                                                                                                                                                                                                                                                         |
|--|---------------------------------------------------------------------------------------------------------------------------------------------------------------------------------------------------------------------------------------------------------------------------------------------------------------------------------------------------------------------------------------------------------------------------------------------------------|
|  | <p><u>업자의 등록</u></p> <p>2. 제9조의4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p> <p>3. 그 밖에 이 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p> <p>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p> <p>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p> <p>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
|--|---------------------------------------------------------------------------------------------------------------------------------------------------------------------------------------------------------------------------------------------------------------------------------------------------------------------------------------------------------------------------------------------------------------------------------------------------------|

## 나. 검토의견

정보통신망은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특징에 기인하여 기업의 물리적 위치나 국적에 관계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바,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국내에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해외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일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주사무소를 해외에 두면서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sup>1)</sup> 등으로 하여금 「신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규정을 보완하고,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위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고, 국외사업자의 법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

1)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이하 생략)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최초 도입<sup>2)</sup>된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개정안은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언론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로서 타당한 것으로 봄.

다만,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는 어려울 수 있는 바<sup>3)</sup>,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모든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효적 관리를 위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참고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한미 FTA에 따른 현지주재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업무는 독자 보호나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 업무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미FTA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 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4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를 점검(2020.2.~8.)한 결과 7개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1]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유사 입법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안 제9조의4 등)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부과 및 동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 <p>제9조의4(자료의 제출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li> <li>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li> <li>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
| <p>제39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 9. (생략)</p> <p>③ (생략)</p> | <p>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신문등<sup>4)</sup>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사항으로서,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기업집단의 소유제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sup>5)</sup>하고 있음.

[표 2] 현행 「신문법」 상 자료 제출 규정

| 제출대상                 | 위반 행위                                                                                                                           |
|----------------------|---------------------------------------------------------------------------------------------------------------------------------|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제17조(여론집중도조사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및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 일반일간신문사업자            | 제19조(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③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개정안은 법 위반사항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 포함)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신문등: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신문법」 제22조제1항)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안 제9조의4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sup>6)</sup>에 연계하여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9조의4제3호는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있는데, 법 제2조제12호에서 신문 등을 공급받고 이용하는 자로서 “독자”<sup>7)</sup>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를 “독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80 |

-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 1

## 관계 협회 등 의견

| 협회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한국인터넷기업<br>협회<br>(2024.7.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은 국내에 사무소 등이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및 사업자에 부과된 의무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도록 하고 있어, 한미 FTA의 현지주재의무 금지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li> <li>○ 신문법상 국민이 아닌 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기사배열책임자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li> <li>○ 자료 제출 요구 조항은 지나치게 폭넓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자료제출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예측이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조사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li> </ul> |
| 언론중재위원회<br>(2024.7.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등록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li> <li>○ 특히 언론중재법에 따른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언론 조정의 당사자로 명확하게 포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ul>                                                                                                                                                                                                                       |
| 한국온라인신문<br>협회<br>(2024.7.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부과되는 공통된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해외사업자에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대리인을 둬으로써 관할 관청이 생겨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임</li> <li>○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임</li> </ul>                                                                                                                                                                                                                  |

| 법률명<br>(법률번호)          | 조문내용(조항)                                                                                                                                                                                                                                                                                                                                                                                                                                                                                                                                                                                                                                                                                                                                                                                                                                                                                                                                                                                                                                                                                                                                                           |
|------------------------|--------------------------------------------------------------------------------------------------------------------------------------------------------------------------------------------------------------------------------------------------------------------------------------------------------------------------------------------------------------------------------------------------------------------------------------------------------------------------------------------------------------------------------------------------------------------------------------------------------------------------------------------------------------------------------------------------------------------------------------------------------------------------------------------------------------------------------------------------------------------------------------------------------------------------------------------------------------------------------------------------------------------------------------------------------------------------------------------------------------------------------------------------------------------|
| 개인정보<br>보호법<br>(16930) | <p><b>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b>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i> <li>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li> <li>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li> </ol> <p>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li> <li>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li> </ol> <p>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b>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b>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li> <li>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li> <li>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b>제75조(과태료)</b>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li> </ol> |
| 전기통신<br>사업법<br>(16019) | <p><b>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b>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li> <li>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li> </ol> <p>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p> <p>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p>                                                                                                                                                                                                                                                                                                                                                                                                                                                                                                                                                                                                                                                                                                                                                                                                                    |

| 법률명<br>(법률번호)                                             | 조문내용(조항)                                                                                                                                                                                                                                                                                                                                                                                                                                                                                                                                                                                                                                                                                                                                                                                                                                                                                                                                                                                                                        |
|-----------------------------------------------------------|---------------------------------------------------------------------------------------------------------------------------------------------------------------------------------------------------------------------------------------------------------------------------------------------------------------------------------------------------------------------------------------------------------------------------------------------------------------------------------------------------------------------------------------------------------------------------------------------------------------------------------------------------------------------------------------------------------------------------------------------------------------------------------------------------------------------------------------------------------------------------------------------------------------------------------------------------------------------------------------------------------------------------------|
|                                                           | <p>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b>제32조(이용자 보호)</b>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b>제104조(과태료)</b>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
| <p>정보통신망<br/>이용촉진 및<br/>정보보호 등에<br/>관한 법률<br/>(17358)</p> | <p><b>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b>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1. ~ 2. 삭제</p> <p>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p> <p>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p> <p>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p> <p>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p> <p><b>제64조(자료의 제출 등)</b>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p> <p>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p> <p>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b>제76조(과태료)</b>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